

 기획재정부		<h1>보도자료</h1>	
<b>보도일시</b>	<b>2021. 12. 9.(목) 10:00</b>	<b>배포일시</b>	2021. 12. 9.(목) 8:00
<b>담당과장</b>	재정혁신국 재정건전성과장 박철건(044-215-5740)	<b>담당자</b>	김영웅 사무관 ssuper84@korea.kr 김선영 사무관 ksunny3@korea.kr
	세제실 조세분석과장 최영전(044-215-4120)		박병선 사무관 ghibli80@korea.kr
	재정관리국 재정집행관리과장 김완수(044-215-5330)		김경중 사무관 rudwnd@korea.kr
	국고국 국채과장 김이한(044-215-5130)		최시훈 사무관 choisihoon@korea.kr

## 「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」 2021년 12월호 [‘21년 10월말 기준]

- ◇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세정지원으로 국세 증가세 둔화
- ◇ 초과세수를 활용한 국고채발행 축소 등으로 금년 총 6.2조원 규모의 국가채무 감축 전망

□ (총수입, 489.9조원) 국세·세외·기금 수입 모두 전년동기대비 증가세가 유지되어 추경예산 대비 진도율은 95.2% 수준

① (국세, 307.4조원) 주로 경기 회복세의 영향으로 법인세, 부가가치세, 소득세 중심으로 증가하여 추경예산 대비 진도율 97.8%

○ 경기 회복세 지속에 따라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진도율이 각각 102.6%, 103.6%(전년동기대비 +7.3%p, +1.9%p)

\* 코스피 12월 결산법인 영업이익(조원 개별기준): ('19) 56.3 → ('20) 67.5 <+19.8%>  
(‘20.상) 29.6 → (‘21.상) 50.1 <+69.1%>

\*\* 소매판매(전년동기대비,%): ('21.1분기) +6.4, (2분기) +4.4, (3분기) +5.0(잠정)

○ 자산시장 호조, 취업자수 증가 등으로 양도·근로 등 소득세의 진도율이 96.8%(전년동기대비 +15.7%p)

\* 상용근로자(월평균, 만명): ('19.12~'20.9)1,453 → ('20.12~'21.9)1,478 <+1.7%>  
명목임금(월평균, 천원): ('19.12~'20.9)3,557 → ('20.12~'21.9)3,709 <+4.3%>

○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세정지원\* 등으로 국세수입 증가세는 둔화(10월 기준 전년동월대비 △6.2조원)

\* (부가가치세) 집합금지 업종 개인사업자 등 납부기한 연장('21.10월 →'22.1월)  
(법인세) 중소기업 중간예납 분납분 납부기한 연장('21.10월 →'22.1월)

**② (세외수입, 23.9조원) 우체국 예금 운용수익\* 증가(+1.0조원) 등으로 추경예산 대비 진도율(81.4%)은 전년수준 유지**

\* 우체국 예금 운용수익률 : ('20.10) 2.6% → ('21.10) 4.6%(+2%p)

○ 코로나로 인한 공항 이용객 감소 등으로 공항공사(한국공항공사, 인천공항공사) 정부출자 수입은 △0.4조원 순감

**③ (기금수입, 158.6조원) 사회보험 대상 확대, 사회보장성기금 자산 운용수익 증가\* 등으로 추경예산 대비 진도율 92.7%, 기금수입에 대한 월별 통계 작성('11년)來 기금수입 진도율\*\*은 최고 수준**

\* 기금 자산운용수익(누계, 조원) : ('21.1월)5.1 (3)15.7 (5)23.8 (7)31.0 (9)38.4 (10)40.7

\*\* 기금 진도율(10월 기준, %) : ('11년)85.3 ('13)84.1 ('15)79.4 ('17)78.2 ('19)81.1 ('21)92.7

○ 고용 회복에 따른 국민연금·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자 수 증가\*로 사회보험료 수입이 대폭 증가(61.5 → 64.7조원, +5%)

\* 국민연금 소득신고자(만명) : ('20.8)1,884 → ('21.8)1,905(+21만명)

\*\* 고용보험 가입자수(만명) : ('20.10)1,423 → ('21.10)1,459(+36만명)

○ 국민연금(+16.5조원)\*·사학연금(+1.2조원)·산재보험(+0.5조원) 등 사회보장성 기금 적립금에 대한 자산운용수익 증가(+18조원)

\*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률 : ('20.9) 4.2% → ('21.9) 8.0%(+3.8%p)

\*\* 국민연금기금 적립금(누계, 조원) : ('20.9) 785 → ('21.9) 919(+134)

○ 코로나에 따른 출국자 수 감소\*로 출국납부금 수입은 △0.1조원 감소

\* 출국자 수(누계, 백만명) : ('20.10) 9.3 → ('21.10) 1.0

(단위: 조원, %, %p)

	'20년						'21년(잠정)				전년동기 대비			
	추경 (A)	결산 (B)	10월 (C)	10월 (누계) (D)	진도율		2차 추경 (G)	10월 (H)	10월 (누계) (I)	진도율 (J=I/G)	10월 (H-C)	누계 (I-D)	진도율	
					추경 (E=D/A)	결산 (F=D/B)							예산 (J-E)	결산 (J-F)
□ 총수입	470.7	478.8	55.2	409.5	87.0	85.5	514.6	47.5	489.9	95.2	△7.6	80.3	8.2	9.7
◇ 국세수입	279.7	285.5	39.1	253.8	90.7	88.9	314.3	32.9	307.4	97.8	△6.2	53.7	7.1	8.9
○ 일반회계	271.9	276.3	37.7	246.2	90.6	89.1	304.6	32.1	298.0	97.8	△5.7	51.8	7.3	8.7
- 소득세	88.5	93.1	10.5	75.5	85.4	81.1	99.5	9.4	96.3	96.8	△1.0	20.8	11.5	15.7
- 법인세	58.5	55.5	2.8	52.9	90.4	95.3	65.5	2.1	67.3	102.6	△0.7	14.4	12.2	7.3
- 부가가치세	64.6	64.9	18.3	66.0	102.2	101.7	69.3	15.3	71.9	103.6	△3.0	5.8	1.4	1.9
- 교통세	15.5	13.9	1.3	12.6	81.8	90.8	15.7	1.3	14.3	91.3	0.0	1.7	9.5	0.5
- 관세	7.7	7.1	0.9	5.8	75.6	82.6	8.3	0.6	6.9	83.2	△0.3	1.1	7.6	0.6
- 기타	37.2	41.8	4.0	33.3	89.5	79.7	46.2	3.3	41.2	89.2	△0.7	7.9	△0.3	9.5
○ 특별회계	7.8	9.3	1.3	7.6	96.5	81.6	9.6	0.8	9.5	98.1	△0.5	1.9	1.6	16.5
◇ 세외수입	29.1	26.9	2.1	21.7	74.5	80.5	29.3	1.7	23.9	81.4	△0.5	2.2	7.0	0.9
◇ 기금수입	161.9	166.2	14.0	134.1	82.8	80.7	171.0	13.0	158.6	92.7	△1.0	24.5	9.9	12.1
(사보기금*)	95.8	100.0	8.5	81.4	85.0	81.4	99.5	8.4	102.6	103.2	△0.1	21.2	18.2	21.7

\* 국민연금기금,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기금, 고용보험기금,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

□ **(총지출, 509.2조원)** 경기회복 뒷받침,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적극적 재정집행으로 전년동기대비 +40.7조원 증가, 추경예산대비 진도율은 전년수준(84.2%)

○ 중앙부처-지자체간 합동 현장점검, 집행애로 사항 모니터링·신속해결 등을 통해 11~12월 두 달간 90조원 규모의 재정집행을 추진하여 경기회복 흐름을 이어가기 위한 대응에 총력

(단위: 조원, %, %p)

	'20년						'21년(잠정)				전년동기대비		
	추경 (A)	결산 (B)	10월 (당월 C)	10월 (누계 D)	진도율		2차추경 (G)	10월 (당월 H)	10월 (누계 I)	진도율 (J=I/G)	증감		진도율 (J-E)
					추경 (E=D/A)	결산 (F=D/B)					10월 (H-C)	누계 (I-D)	
◇ 총지출	554.7	549.9	33.7	468.5	84.5	85.2	604.9	37.2	509.2	84.2	3.5	40.7	△0.3
○ 예산	377.5	374.4	23.0	327.5	86.8	87.5	409.7	24.5	346.1	84.5	1.5	18.6	△2.3
- 일반회계	323.5	320.8	19.7	281.4	87.0	87.7	348.8	21.7	295.1	84.6	2.1	13.7	△2.4
- 특별회계	54.0	53.6	3.3	46.1	85.4	85.9	60.9	2.7	51.0	83.7	△0.6	4.9	△1.6
○ 기금	177.3	175.2	10.7	140.9	79.5	80.4	195.2	12.7	160.8	82.4	2.0	19.9	2.9
(사회보장성기금)	61.2	59.1	4.9	49.8	81.4	84.2	63.2	5.2	54.4	86.0	0.3	4.6	4.6
○ 세입세출외*	-	0.4	-	0.1	-	36.4	-	-	2.4	-	-	2.2	-

\* 자치단체 교부금 정산 등

< 주요 재정사업 집행 실적 >

- ①코로나 피해지원, ②민간소비 촉진 및 원자재 수급 안정, ③고용회복 사업 적극 집행
- ① 2차 추경사업의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는 11월말까지 총 4,826만명(총계)에 14.5조원 지급(총 16.3조원(국비) 중 89.0% 집행)
- 상생국민지원금(국비, 8.6조원)은 4,302만명에게 8.4조원(97.8%) 지급
  - 소상공인 손실보상(2.4조원)은 10.27일부터 지급을 개시하여 12.6일까지 56.9만개사에 1.7조원 지급,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(4.2조원)은 189만명에 4.2조원(100%) 지급 완료
  - ※ 소상공인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대해서는 11.29일부터 일상회복 특별용자(2조원) 신청접수를 시작하여 12월 중반부터 금융지원 예정
  - 상생 소비지원금(0.7조원) 11월분 캐시백은 11월말 기준 2,583억원(가집계) 발생, 12.15일 지급 ※ 10월분 캐시백은 810만명에 대해 총 3,875억원 지급 완료(11.15일)
- ② 상생 소비지원금 외에도 방역상황과 연계하여 농축·수산물 할인쿠폰 지원(10월말까지 0.2조원 집행 등) 내수회복을 위한 집행에도 중점
- 국내 석유수급 안정을 위한 비축유 구매(10월말까지 119억원), 비철금속 비축물량 확보(10월말까지 2,561억원) 등 원자재 수급 안정노력
- ③ 고용유지·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적극적 재정 집행 노력 지속
- 구직급여\*(11.3조원)는 10월말까지 56.5만명에 대해 10.5조원 집행(92.1%)
  - \* 구직급여 수급자(만명) (21.4)73.9 (5)70.4 (6)69.3 (7)67.9 (8)64.7 (9)61.2 (10)56.5
  - 10월말까지 직접일자리 사업(3.2조원)은 3.1조원(98.7%) 교부, 2.5조원(80.3%) 지급

□ **(재정수지)** 국세·기금수입 등 총수입 개선세 유지로 재정수지 적자 대폭 감소(△59.0→△19.3조원, +39.6조원)

○ 현 개선세 유지시 연말기준 재정수지는 정부 전망치(△90.3조원)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

(단위: 조원, %, %p)

	'20년						'21년(잠정)				전년동기대비		
	추경 (A)	결산 (B)	10월 (당월 O)	10월 (누계 D)	진도율		2차 추경 (G)	10월 (당월 H)	10월 (누계 I)	진도율 (J=I/G)	증감		진도율 (J-E)
					추경 (E=D/A)	결산 (F=D/B)					10월 (H-C)	누계 (I-D)	
◇ 총수입(A)	470.7	478.8	55.2	409.5	87.0	85.5	514.6	47.5	<b>489.9</b>	95.2	△7.6	<b>80.3</b>	8.2
◇ 총지출(B)	554.7	549.9	33.7	468.5	84.5	85.2	604.9	37.2	<b>509.2</b>	84.2	3.5	<b>40.7</b>	△0.3
◇ 통합재정수지 (C=A-B)	△84.0	△71.2	21.5	△59.0			△90.3	10.3	<b>△19.3</b>		△11.2	<b>39.6</b>	
◇ 사회보장성 기금수지(D)	34.6	40.8	3.6	31.6			36.2	3.2	<b>48.3</b>		△0.4	<b>16.6</b>	
◇ 관리재정수지 (E=C-D)	△118.6	△112.0	17.9	△90.6			△126.6	7.1	<b>△67.6</b>		△10.8	<b>23.0</b>	

□ **(국가채무)** 국고채 발행 규모는 11월말 기준 174.7조원  
(발행 한도 186.3조원의 93.8%)

※ 10월 중앙정부 채무 : 939.6조원(국고채 841.9, 주택채 82.9, 외평채 11.7 등)

○ 11월 국고채 응찰률은 시장안정조치 등에 따른 변동성 완화로 전월비 소폭 상승(10월 278% → 11월 291%)하는 등 안정적으로 발행량 소화

\* 국고채 조달금리(%) : ('16~'19 평균)1.96 ('20)1.38 ('21.1~11월)1.78

- 특히, 외국인 국내 채권 순투자\*는 건조한 경제 펀더멘털, 신용등급 대비 높은 수익률\*\* 등에 힘입어 예년과 달리 11월까지도 순유입 지속('06.8~'08.6월 이후 13년 5개월만에 최장기간 유입세)

\* 外人 원화채 순투자(조원) : ('19)+9.9 ('20)+26.5 ('21.1~11월)+58.2

外人 국고채 순투자(조원) : ('19)+12.0 ('20)+23.3 ('21.1~11월)+37.9

外人 국고채 보유잔액/비중(조원 % 기말): ('19)98.3/16.1 ('20)121.6/16.7 ('21.11월)159.5/18.8

\*\* 주요국 국채 10년물 금리(% 11월말): (韓)2.2 (美)1.4 (英)0.8 (獨)△0.4 (호주)1.7

○ 11월 국고채 금리는 긴급바이백(11.5일, 2조원) 이후 안정세 유지

- 특히, 기준금리 인상(11.25일, 0.75→1.00%)에도 불구하고, 초과세수를 활용한 12월 발행량 축소\*, 금리 선반영 인식 등으로 하향 안정세\*\*

\* 국고채 10년물(%) : (10월말) 2.575 (11.5, 긴급바이백) 2.350 (11.25) 2.348 (11.30) 2.213

\*\* 초과세수 19조원 중 2.5조원 국채상환분 활용, 12월 발행량 전년수준(5.8조원)으로 축소

### 국고채 관련 주요 통계

(조원, %)		'20년말	'21년				
			11월말	8월	9월	10월	11월
발행잔액		726.8	848.1	832.7	831.7	841.9	848.1
발행액		174.5	174.7	16.0	11.5	12.8	10.4
평균 조달금리*		1.38	1.78	1.73	1.82	2.18	2.26
응찰률(%)		295%	283%	284%	283%	278%	291%
외국인 국고채	보유잔액 (순투자)	121.6 (+23.3)	159.5 (+37.9)	(+3.5)	(+3.0)	(+2.3)	(+2.6)
	보유비중(%)	16.7%	18.8%	18.1%	18.6%	18.7%	18.8%

\* '20년말, '21.11월말의 경우 각각 '20년, '21.1~11월 평균 조달금리, 그 외 월평균 조달금리

□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**최근 재정동향의 특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음**

**①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「확장재정→경제회복→세수증대」의 '재정의 선순환 구조'가 지속**

- ① 기금수입은, 취업자 증가에 따른 사회보험 가입자 증가, 국민연금 등의 자산운용 수익 증가로 10월말 기준(누적), 규모 (158.6조원) · 진도율(92.7%) 모두 최근 10년來 최고 수준

- ② 통합재정수지는 국세 · 기금수입 등 재정수입 호조세(누계기준 +80.3조원)로 10월말 기준 적자규모가 전년대비 1β수준으로 축소

\* ('20.10월말) △59.0 → ('21.10월말) △19.3조원 (적자개선폭 +39.6조원)

- ③ 초과세수를 활용한 2.5조원 국고채발행 축소 등으로 금년 총 6.2조원\* 규모의 국가채무 감축 전망

\* ① '20 회계연도 세계잉여금 1.7조원 + ② 2차 추경 편성시 국고채 상환 2조원 + ③ 금년 초과세수를 활용한 국고채 발행 축소 2.5조원

**② 우리 경제의 견조한 펀더멘털 등에 힘입어 외국인의 국내 채권 투자가 예년과 달리 11월까지도 순유입을 지속하며, 13년 5개월 만에 최장기간 유입세 기록**

※ 통상 4분기는 장부마감(book closing)으로 외국인 채권자금 유입세가 둔화되거나 순유출 전환하는 경향이 있으나, 올해는 10월에 이어 11월에도 유입흐름 지속

③ 그간 예상보다 큰 폭의 세수개선 흐름이 지속되어 왔으나, 10월 들어 코로나 피해업종 소상공인 세정지원 효과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월별세수가 처음으로 감소(△6.2조원)

④ 글로벌 공급망 차질, 코로나 변이바이러스 확대 등으로 경기개선이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, 성장률 목표 달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정의 역할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

\* 전산업 생산(전월비, %) : ('21.5)△0.2 (6)1.6 (7)△0.7 (8)△0.1 (9)1.1 (10)△1.9

\*\* 설비투자(전월비, %) : ('21.5)△2.6 (6)0.2 (7)2.0 (8)△4.4 (9)△1.8 (10)△5.4

- 남은 기간 동안 중앙부처-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집중 실시 등을 통해 재정·공공 투자사업의 집행률 제고, 이·불용 최소화 등 재정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

-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업종의 '21.3/4분기 피해액에 대한 손실보상\*을 최대한 신속히 지급하고, 일상회복 특별용자\*\* 등 손실보상 非대상업종에 대한 지원도 차질없이 이행

\* 손실보상(12.6일): (신청)신속보상 57.1만개, 확인보상 15.3만개 / (지급)56.9만개, 1.7조원

\*\* 일상회복 특별용자(12.5일): (신청)10,511건, 2,102억원 / (지급)58건, 12억원

⑤ 내년에도 코로나 위기 완전극복 등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 재정이 적극적 역할 할 수 있도록 조기집행에 역점

\* OECD도 최근('21.12.1) 경제전망(Economic Outlook)을 통해 “경제가 완전히 회복 시까지 펜더믹 영향을 받은 가계·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지속할 것”을 우리나라에 권고

- 코로나 대응과 미래도약 뒷받침을 위한 사업 중심으로 내년 상반기 역대 최대 수준인 73.0% 배정

- 배정된 예산은 연초부터 원활한 집행이 이뤄지도록 주요 사업별 집행계획 수립 등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힘

<붙임>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1년 12월호(배포용)



기획재정부 대변인  
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[moefpr@korea.kr](mailto:moefpr@korea.kr)



## 참고

## 12월호 주요재정이슈 요약

※ 기고문을 자체 요약한 자료이며, 전체본은 「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12월호」(붙임)에 게재

### ①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혁신적 균형발전전략 (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원장)

- ① (현황) 최근 지방 중소도시의 인구감소와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인해 전국 시·군·구 소멸 고위험지역은 급증 추세
  - \* 전국 시·군·구 소멸 고위험지역 수(개) : ('17) 7 ('18) 11 ('19) 16 ('20) 23 ('21) 36
  - 대도시일수록 생활여건이 우수하여 인구 유입이 촉진, 이에 따라 경제발전의 동력이 확대되어 소도시와의 격차 누적 확대
  - ⇒ 지역 간 격차 확대시 지역의 잠재력 소실, 사회통합, 형평성 가치 저해가 우려되므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
- ② (추진방향) 지역 간 생활여건 격차 축소와 함께 지역특화 인재 육성 지원, 지역 간 연계·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유도
  - ① (보편적 복지 확대) 광역교통망 조성 및 원격서비스 제공 등 중심부와 주변 도시 간 연결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지원
    - 인구소멸지역 주민들의 도시지역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제고
  - ② (지역대학 혁신) 수도권에 편중된 고등교육 투자에서 탈피, 지역 특화 분야에 경쟁력을 갖춘 지역대학 육성
    - 획기적인 재정지원과 함께 대학에 대한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관한 의무도 부과, 지역대학 혁신을 통해 지역인재 정착 유도
  - ③ (지역간 연계·협력) 지방분권을 기반으로 지역 간 연계·협력을 통한 규모의 경제와 경쟁력 강화 도모
    - 지역주도의 발전 계획 수립, 지역 간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확대 및 지역 간 자율적 협력체계 지원
- ③ (시사점) 국가균형발전의 모멘텀으로서 지역주도의 초광역협력을 지원('21.10.14)하는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과 유사한 맥락
  - 단일 행정구역을 넘어선 초광역적 정책·행정수요에 대응하여 단일의 경제·생활권 조성 지원, 초광역형 인재양성, 특별교부세 지원을 통한 지역 간 견고한 협력체계 적극 지원

## ② 주요국의 향후 재정운용방향(조세연 재정지출분석센터)

- ① (재정운용방향) 주요국은 경제회복과 미래대비를 위한 재정 투자를 지속하면서 중기적으로는 단계적인 재정건전화 노력 강화
- ① (투자방향) 각국은 코로나 관련 긴급지원은 점차 축소하되, 경제회복과 탈탄소화·디지털화 등 미래 대비를 위한 투자 강화
- 공공서비스 강화(영), 소득분배 개선(일), 사회통합강화(독), 청년지원(프랑스) 등 국가별 현안 해결을 위한 재정지원에도 중점
- ② (재정건전화) 위기 종식 이후 단계적인 재정안정화 추진
- (프랑스) '22년~'27년 연평균 지출증가율을 0.7%로 제한하며 '27년까지 GDP대비 재정적자를 3% 미만 수준으로 회복 노력
  - (독일) '23년부터 채무제한법을 재적용하고 차입금에 대한 상환을 계획하는 등 건전화조치를 통해 '25년 균형재정 회복 추진
  - (영국) 순채무 비율을 점차적으로 축소하고 재정수지 균형을 달성토록 하는 재정준칙 개정안 도입 등 재정건전화 노력 강화
  - (일본) 기시다 내각의 핵심과제 이행 위해 '21.11월 추경 편성 등 확장적으로 재정운용, 다만 중기적으로 재정안정화 목표

\* 추경 규모: 재정지출 55.7조엔, 신규 국채 발행액 22조엔

< 주요국 재정수지(GDP 대비 %) >

	'21	'22	'23	'24	'25
프랑스	△8.4	△4.8	△4.3	△3.8	△3.4
독일	△7.25	△3.25	△1.5	△0.5	0.0
영국	△7.9	△3.3	△2.4	△1.7	△1.7
일본	△8.1	△4.0	△2.7	△1.8	△1.1

- ② (시사점) 우리 '21~'25년 중기계획과 재정운용방향이 유사
- ① 우리나라도 탄소중립·디지털전환 등 미래대비 투자와 함께 소상공인 지원 등 우리 고유 현안 해결을 위한 재정투자 확대
- ② 단기적으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지속하면서, 중기적으로 단계적인 재정건전화 노력도 강화

\* '21~'25 계획상 재정수지(GDP대비%) : ('21)△4.4 → ('23~'25)△2.9~△3.0

### ③ 코로나19 이후 유럽연합의 재정준칙 동향 및 시사점 (조세연 재정지출분석센터)

① (현황) EU는 '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통해 재정준칙 도입 (채무60%, 수지△3%), 그간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준칙 지속 개정

\* 안정성장협약('97) : 면제요건 규정 , EU 정상회의('05) : 준칙 면책조항 확대

○ '20.3월에는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해 준칙 적용을 면제

→ 면제조치는 '22년까지 지속된 후 '23년 중단 예정

\* "경기 침체에 대처하기 위한 재정준칙 '일시 중단' 조치를 내년에도 유지, 현 경제전망에 기초했을 때, 면책조항은 '23년에 중단(EU 집행위, '21.6월)"

② (개정 동향) 위기 이후 EU는 준칙의 유연성 확보와 더불어, 개별 국가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준칙 개정 논의 중

\* '21.10월 유럽재정위원회(EFB;European Fiscal Board) 보고서 중심으로 설명

① (유연성) 그간 면책조항 발동요건이 불분명하였다는 지적에 따라 면책조항을 명확하게 재설정하여 준칙의 유연성 담보

② (개별성) 채무·수지 기준(채무60%, 수지△3%)은 유지하되, 위기 이후 채무감소속도를 국가별로 차별화 할 수 있도록 재설계

- 위기대응과정에서 악화된 채무비율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재정건전화계획에서 국가별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정

③ (시사점) EU의 준칙 개정동향이 우리의 준칙 설계방향과 유사

○ 우리나라도 면제·완화요건 등 보완장치를 마련하고, 관리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등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준칙 설계

○ 고령화 심화 등 우리나라 재정여건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수지·채무 지표가 상호보완적으로 설계된 형태의 관리기준 마련

#### 4 코로나19와 재정지원일자리 정책의 의의 및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(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)

1 (일자리 정책의 성과) 지난 2년간 총 72조원의 일자리 예산 지원을 통해 위기로 인한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충격 완화 적극 지원

\* (고용유지) 고용유지지원금, 고용창출장려금,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 
(직접 일자리) 노인일자리 지원,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, 장애인 인턴제 지원 등  
(고용안전망) 구직급여, 저임금근로자 및 예술인특고 종사자 고용보험 가입 추진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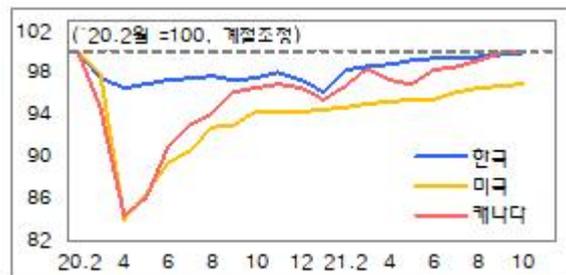
○ 주요 선진국보다 빠른 고용 회복\*, 상용근로자 비중 확대,  
고용의 양과 질 모두 개선 추세

\* '21.10월 기준 취업자수는 '21.1월 이후 증가하여 코로나19 위기 초기('20.2월) 수준의 99.9% 수준까지 회복

<표2> 코로나 위기 중 한국의 취업자 수준



<표3> 주요국 취업자수 추이 비교



2 (향후 과제)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중고령층의 일자리 유지,  
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근로자의 안정적 고용전환 지원 필요

○ AI·빅데이터를 활용한 개인별 최적의 교육경로 설계 등을  
통한 평생직업 교육훈련 혁신이 중요

○ 디지털·저탄소화 전환 등에 따른 산업구조 대응 특화 직무  
훈련 강화 필요

3 (시사점) 경제·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충격 완화를 위해  
직업훈련, 재교육 기회 제공 등 고용유지·고용안전망 확충  
지원 강화 필요